

# 반려동물 1천400만 시대...보유세 놓고 찬반 '침예'

### 찬성 "동물복지 위한 과정" vs 반대 "경제 부담·유기 증가" 정부, 반려동물 관리 국민의견수렴...보유세 항목 최근 삭제

정부가 반려동물 복지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국민의견수렴절차를 밟고 있는 가운데 '보유세 신설'에 대한 찬반 의견이 팽팽하다.

반려동물 1천400만 시대를 맞아 보유세 신설을 찬성하는 측은 동물복지를 위한 과정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반대측은 경제적 부담과 유기 동물을 가중시킨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서다.

24일 농림축산식품부와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8일부터 28일까지 열흘간 '반려동물 관리방안' 등에 대한 5가지 문항에 대한 국민의견수렴을 진행 중으로 이날 기준 5천800여명이 설문문에 참

여했다.

실론 문항은 반려동물 소유자의 책임을 확대하고 동물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 도입 관련 내용으로 ▲반려견 동물등록 의무와 과태료 부과 인식 여부 ▲반려동물 입양 전 교육 의무화 ▲동물학대 행위자에 대한 동물 사육 금지 필요성 ▲개물림 사고를 유발한 개에 대한 안락사 필요성 ▲반려동물 소유자에 대한 보유세 신설 등 5개 항목이다.

하지만 이중 '반려동물 보유세 신설' 관련 문항에 거센 반발이 일자 농식품부는 전날 해당 항목만을 삭제했다.

반려동물 보유세란 반려동물을 기우

는 사람들에게 매년 일정 금액을 세금으로 거둬 이를 동물병원 의료보험 등 동물복지와 관련된 예산으로 활용하는 제도를 뜻한다. 반려인의 조건을 강화해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정착시키고 유기 동물의 수를 줄이는 등 동물권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 '보유세 신설'에 대해 시민 2명 중 1명으로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여론조사기관 조원씨앤이아가 지난 8-9일 실시한 '동물권 보호 관련 국민인식 조사' 결과 설문에 참여한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2명 중 55.6%는 동물권 향상을 위한 반려동물 보유세 신설에 동의했다.

국민의견수렴 사이트에는 실제로 '보유세에 찬성한다'는 다수의 댓글이 게시됐다.

댓글에는 '반려동물 등록 의무를 통해 보유세를 정착시켜야 한다', '보유세를 통해 소유자는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보유세 도입이 동물학대를 줄일 수 있다', '제도가 도입되면 유기견을 줄이는데 일조할 것이다' 등 긍정적인 댓글이 줄을 이었다.

이에 반대 의견도 다수 게재됐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반려동물 등록률이 10-30%로 매우 낮은 수치로 보유세를 물면 공평하지 못한 제도가 될 것', '보유세를 물 경우 경제적 부담으로 다수의 유기견이 발생한다' 등 보유세와 관련해 '시기상조'라는 부정적인 의견이 대립했다.

또한 시골개개의 경우 세금을 징수할 경우 동물등록을 하는 대신 유기동물만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됐다.

해외에서도 반려동물 보유세의 성공

과 실패 사례가 공존한다.

실제 200여년 전 영국에서 광견병 명분과 유기동물 발생 예방, 들개화, 배변문제 등으로 인해 징벌적 성향의 세금으로 시작된 반려동물 보유세 정책은 성실납세자의 회의감을 일으키는 불공정 조세로 인해 폐지된 바 있다.

이후 1910년 독일에서는 전국 반려견 동물등록을 전수조사를 통해 100% 완료했고, 민관이 힘을 합쳐 반려동물 보유세 시행에 성공했다. 세금은 '반려인으로서 책무를 다하자'는 시민들의 호응에 힘입어 성공적으로 정착했고, 독일 베를린에서 연간 140억원의 세금을 징수해 반려동물 복지정책자금으로 쓰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제도 도입 전에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확산과 전문가로 구성된 동물복지전담 기구의 신설이 선

제 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조경 광주여대 반려동물보건학과 겸임교수는 "이미 1796년 영국에서 최초로 시행됐던 반려동물 보유세 제도는 한번 실패했다"면서 "현재 시민 의식화와 동물등록이 미미한 상황에서 시작될 경우 우리나라도 같은 실패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시민 교육을 통한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고취가 우선시되어야 하며, 동물전담기구가 공적기관으로 출범돼 지자체 등과 협력을 통해 점진적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교육을 통해 반려동물 문화를 형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법과 제도를 받아들일 수 있는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이 자리잡았을 때 진정한 동물복지가 실현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오복기자



“송편 빚기 재밌어요” 추석 연휴를 2주일에 앞둔 24일 광주 북구 삼각동 남도향도음식박물관에서 열린 '전통음식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한 아이들이 강사의 도움을 받아 송편을 만들어보고 있다. /김영근기자

## 조선대 이사장, 총장 징계 의결 요구 '파장'

### 징계 양형에 따라 학내분란·이미지 훼손 우려

조선대학교 이사회와 총장 간의 갈등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학교법인 조선대학교 김이수 이사장이 24일 민영돈 총장에 대한 징계 의결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했기 때문이다.

초유의 총장 징계가 현실화되면서 학내분란과 대내외 대학 이미지 훼손이 불가피해졌다.

이사회 관계자는 "총장 임명권자인 이사장이 법령 위반 등의 이유로 총장에

대한 징계 의결을 요구한 것"이라며 "징계위원회가 1주일 정도 후에 열릴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징계위원회는 총 9명으로 구성됐다. 징계위원회는 징계 여부, 징계 양형 등을 결정한다.

법인 이사회는 민 총장이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징계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결정할 단과대학장 등에 대한 징계안을 이사회에 올리라는 지시를 거부한 민 총장

이 사립학교법을 위반해 징계 대상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 총장 등 학교 측은 이사회가 부당하게 학사 운영에 개입하고 있다며 반박했다.

이에 따라 징계위원회의 징계 결정 등에 따라 대학이 후폭풍에 휩싸일 수도 있다.

현재 학교 구성원들은 2023학년도 수시모집 등을 앞두고 학내 분란과 대학 이미지 훼손 등을 우려하고 있다. /임재만기자

## “복합쇼핑몰, 민관협의회 요구는 유치 무산·이권 노린 시도”

### ‘유치 광주시민회의’ 주장

현대백화점그룹과 신세계그룹이 광주 복합쇼핑몰 건립 의사를 밝힌 가운데 시민과 상인들의 찬반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복합쇼핑몰 유치 광주시민회의는 24일 입장문을 내고 복합쇼핑몰로 인한 피해를 우려하는 상인들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들은 “광주지역 상권은 복합쇼핑몰이 없는 지금도 인터넷 쇼핑과 역외소비에 고객을 빼앗겨 어렵기는 마찬가지”라며 “오히려 복합쇼핑몰이 들어서면 전남·

북은 물론이고 충청 이남과 수도권에서 유동 인구가 몰려들어 지역 상권이 부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상인단체가 민관협의회를 구성하라고 광주시에 요구한 것에 대해 “어등산관광단지가 17년 동안 공회전하게 된 데에는 민관협의회가 큰 몫을 했다”며 “집단지주의에 사로잡혀 지역발전의 가로막은 사례인데 이런 민관협의회를 요구하니 시민들은 분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소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유통산업발전법에는 이미 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명문화돼 있다”며 “이런 법적 인규와 별도로 일부 이익집단화된 상인단체 중심의 민관협의회를 만들자고 하는 것은 유치를 무산시키거나 이권을 노린 시도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복합쇼핑몰 광주상인대책위는 전남 기자회견을 열고 “대기업들의 복합쇼핑몰 출점이 지역 상권 파산과 도산으로 이어지길 원치 않는다”며 “광주시는 이해당사자인 상인들을 만날 수 있는 민관협의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대인기자

## 을지연습 중 화순군청 공무원 무더기 이탈

을지연습의 일환으로 24시간 근무 상황실을 지켜야 할 화순군청 공무원들이 단체로 근무지를 이탈했다가 복무 감찰에 적발됐다.

24일 화순군 등에 따르면 을지연습 첫날인 지난 22일 오후 11시20분경 화순군 전시종합상황실에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 감사관들이 찾아와 복무실

태를 점검했다.

점검 결과 당일 오전 6시부터 24시간 상황실을 지켜야 할 40여명의 공직자들 가운데 20명이 상황실에서 이탈한 상태였다.

이 가운데 13명은 청사 내 각 실과 사무실에 있었고, 5명은 휴먼장이나 주차장 등 실과 사무실이 아닌 공간에 머물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2명은 아예 집으로 돌아갔다가 점검이 끝날 때까지 복귀하지 않았다.

군 관계자는 “상황실을 이탈한 것은 잘못이지만 다음 날 보고할 서류를 작성하는 등 각 실과 사무실에서 필요한 업무를 해야 하는 사정이 있었다”며 “실과 사무실이 아닌 곳에 있었던 사람들 역시 잠시 자리를 비운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복귀하지 않은 2명은 가족의 건강 문제로 급히 귀가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화순=이병철기자

## ‘노조활동 방해’ 대양판지 임직원 항소심도 ‘유죄’

어용노조를 만들어 노조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양판지 임직원 원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부(유효영 부장판사)는 24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양판지 임직원 6명의

항소심에서 5명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40시간을 선고받은 사업본부장 A (63)씨에 대해서는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3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건강 약화로 치료받고 있고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0년 3월 회사에 우호적인 노조를 설립하기로 한 뒤 노조 설립 총회를 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설립 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오복기자

#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Rg3홍삼을 선물하세요! 시대가 요청하는 Rg3홍삼!

**품질을 비교할 때 홍삼성분 함량 꼭 확인!!**

- 제품1g당 함유된 홍삼성분 함량  
예) 고려홍삼순원액 - 1.6mg/g  
홍삼사랑 ----- 2.7mg/g
- 홍삼농축액(홍삼성분70mg/g)기준 비율  
예) 고려홍삼순원액 - 2.25%  
홍삼사랑 ----- 3.8%
- 주요성분 Rb1+Rg1+Rg3 함량  
예) 고려홍삼순원액 - 9mg/포  
홍삼사랑 ----- 13mg/포
- 인삼성분을 변화시킨 산삼성분 Rg3  
예) 고려홍삼순원액 - 4mg/포  
홍삼사랑 ----- 6mg/포

**실비용**

고려홍삼순원액(70ml) 30포

**고급선물용**

홍삼사랑(60ml) 30포

**홍삼성분함량과 가격을 비교해보세요!**

고려홍삼순원액 50,000원 → 45,000원  
홍삼사랑 150,000원 → 135,000원

**고품질을 보증하는 바로 이 맛!**

한약재, 첨가물 NO!	
홍삼성분 다량 함유	▶ 씹살한 맛
산삼성분 Rg3 다량 함유	
6년근 1등삼 25지	▶ 풋내가 없음
국산 홍삼만 사용	▶ 느끼한 맛 없음
불필요한 고형분 제거	▶ 깔끔한 맛

홍삼성분만으로도 맛과 색이 진하므로 다른 첨가물이 필요없습니다.

혼자 먹기엔 아까운 품질!

**동별 매장 모집** | 자격 : 6평 이상 매장 준비 가능한 분  
보증금 : 없음

**(주) 고려홍삼공사 061) 373-8179**

www.고려홍삼.shop